

# 2014년 영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노사관계 및 조직행동학 박사)

## ■ 머리말

새해 벽두부터 영국 정부는 한껏 고무돼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현황이 경제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11월 동안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실업자 수 감소폭은 1997년 이후 가장 가팔랐다. 이 같은 고용회복세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7%를 달성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sup>1)</sup>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면서 시급한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더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경제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국의 경제성장이 기업투자보다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소비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중앙은행은 최근 열린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설사 조만간 실업률이 목표했던 7%를 달성하더라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에 따라 한동안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기관 등에서 내놓은 경제 및 고용상황 전망치를 분석하면서 2014년 영국 노동시장을 전망해본다.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의 경제성적표가 향후 정권교체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이를 둘러싼 동향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이 고용의 양은 물론 질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둘러싼 노-정 갈등을 야기해왔던 측면을 감안, 고용형태별 노동자 규모 변화 추이 및 노사관계 동향을 함께 살핀다.

## ■ 실업률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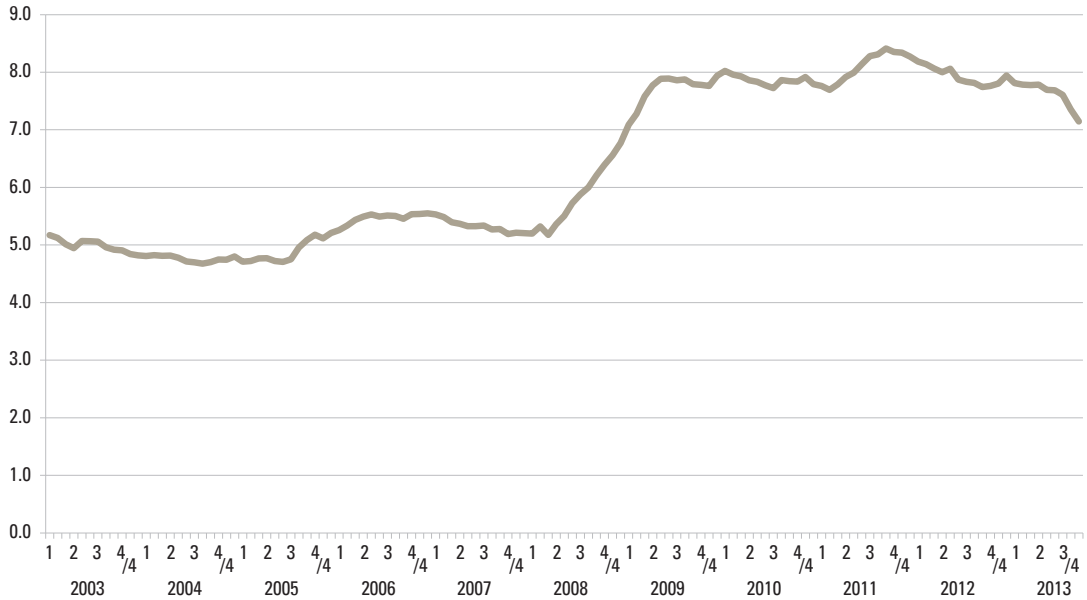
2013년 영국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세’로 요약된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sup>2)</sup> 지난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실업자 수는 16만 7천 명이 줄어 232만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7.1%로까지 떨어졌다. 5~7월 실업률보다는 0.3%포인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0.5%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 중앙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실업률이 7%에 이를 때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실업률 7%’는 경기회복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 수는 3,015만 명으로 늘었다.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2013년 11월 2만 4천 명이 줄어든 1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 진입한 수개월 이후부터 영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했다(그림 1 참조). 5%를 약간 웃돌던 실업률은 9~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6.2%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7.8%로 치솟았고, 2011년에 8.4%까지 증가했다. 이는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2년 7.7%, 2013년 7.1%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과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16~24세)의 고용상황 역시 호전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고용상태에 있는 이 연령대의 청년층은 368만 명으로 전분기(6~8월)보다 7만 7천 명이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는

2) ONS(2014), Labour Market Statistics, January 2014.

[그림 1] 실업률 추이(계절조정치)



자료 : ONS(2014), Labour Force Survey.

261만 명으로 전분기와 견줘 4만 6천 명이 줄었다.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은 전분기와 견줘 3만 9천 명이 줄어든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은 전분기와 견줘 1.0%포인트 줄어든 20.0%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풀타임으로 학업 중인 청년층을 제외한다면,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청년층 실업자 수는 63만 3천 명이고, 실업률은 18.1%라고 밝혔다.

## ■ 고용회복세 동력

그렇다면 어떤 고용형태가 고용회복세를 주도했을까? 우선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나눠서 보면, 풀타임 증가폭이 파트타임보다 컸다. 2013년 9~11월의 경우, 풀타임으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1,883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848만 명)보다 1.9% 증가했다. 반면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 수는 67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74만 명)보다 0.5%포인트 줄었

다. 9~11월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2012~2013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규모 모두에서 각각 1.3, 0.5%포인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풀타임 고용규모는 2.8% 증가했지만 파트타임은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트타임 노동자들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택한 비율은 10명 중 2명꼴로 상당한 수준이며,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792만 명, 비고용 상태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 가운데 풀타임 일자리를 갖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144만 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2011년과 2012년 같은 기간(17.0%, 17.5%)과 견줄 때 각각 1.2%포인트, 0.6%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그만큼의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기대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빈곤층을 양산할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다만 임시직 일자리에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2013년 9~11월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율(36.8%)이 전년 같은 기간(39.7%)과 견줄 때 2.9%포인트 줄었다. 전체 임시직 노동자 159만 명 가운데 비자발적 임시직은 58만 6천 명으로 2011년 및 2012년 같은 기간(각각 59만 3천 명, 65만 5천 명)보다 적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되는 집단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라 자영업자로 분류된 규모는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436만 명이었고, 전년 같은 기간(421만 명)보다 15만 명이 늘었다. 2011년 같은 기간(412만 명)과 견줘보면 2년 새 24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의 증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독립된 사업을 하는 명실상부한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으로 누군가에 '종속'된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유사 자영업자(bogus self-employed)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 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

살펴본 것처럼 고용형태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영국 정부는 2013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6%보다 2배 이상 높은 1.4%로 상

향 조정했고, 2014년 성장률도 1.8%에서 2.4%로 높여 잡았다.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도 GDP 성장률이 각각 2.2%, 2.6%에 이르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참조). 영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과감한 예산삭감 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는 공공연히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긴축정책으로는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외부 전망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스본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영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긴축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그는 2015년 선거 이후 추가로 250억 파운드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

〈표 1〉 경제전망 개요

		전년대비 변화율						
		성과	전망치 <sup>1)</su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불변시장 가격 기준 산출량	국내총생산(GDP)	0.1	1.4	2.4	2.2	2.6	2.7	2.7
	실질GDP(2012=100)	100.0	101.4	103.9	106.2	108.9	111.8	114.8
	생산격차(잠재GDP 대비 %)	-2.6	-2.3	-1.8	-1.6	-1.2	-0.7	-0.2
불변시장 가격 기준 지출 측면에서 본 GDP	가계소비 <sup>2)</sup>	1.2	1.9	1.9	1.7	2.4	2.8	2.8
	기업투자	2.6	-5.5	5.1	8.6	8.7	8.9	7.9
	정부지출	1.7	0.7	0.4	-0.5	-1.0	-1.8	-1.1
	정부투자	4.6	-6.9	7.3	1.2	2.1	0.5	-1.1
	순대외무역 <sup>3)</sup>	-0.7	-0.2	0.0	0.1	0.0	0.0	-0.1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CPI)	2.8	2.6	2.3	2.1	2.0	2.0	2.0
노동시장	고용(백만 명)	29.5	29.9	30.2	30.4	30.7	30.9	31.2
	평균소득 <sup>4)</sup>	2.0	1.5	2.6	3.3	3.5	3.7	3.8
	ILO 기준 실업률(%)	7.9	7.6	7.1	7.0	6.6	6.1	5.6
	실업급여 수급자(백만 명)	1.59	1.43	1.27	1.23	1.18	1.13	1.10

주 : 1) 2013년 11월 27일 발표된 국가통계청(ONS) 자료 기준(2013년 3분기 전망치).

2) 가계와 비영리기관 포함.

3) GDP 성장 기여분, GDP 대비 pp.

4) 근로소득을 근로자 수로 나눈 수치.

자료 : OBR(2013),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을 발표했다.<sup>3)</sup> 그는 예산삭감의 대부분은 복지에산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주택 및 25세 이하에게 주어지는 주택 보조금 등을 예로 들었다.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당수는 “노동연령대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삼는 건 도가 지나치고 현실적이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긴 했지만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한 복지에산 삭감 등을 뼈대로 한 정부 예산 삭감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본 장관은 “아직 우리가 할 일의 반도 채 마무리 짓지 못했고, 갈 길이 여전히 멀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계속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지지정당에 대한 태도(표 2 참조)에서도 드러난다. ICM과 일간 가디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sup>4)</sup>결과는 영국 국민들의 경기회복 체감도와 지지정당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13년 12월 조사<sup>5)</sup>에서 ‘경기회복으로 자신 혹은 자신들의 가족이 혜택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얻는 게 없다’는 응답자가 70%로 ‘혜택이 있다’고 답한 사람(26%)보다 3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50%)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그렇지 않다’는 42%). ‘누가 경제를 더 잘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수당을 뽑은 응답자가 39%로 노동당(23%)보다 많았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2013년 11월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2%로 집계돼 노동당(지지율 37%)과의 격차가

3) BBC, 2014년 1월 6일자, “George Osborne targets welfare as he wams of £25bn more cuts”.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5617844>

4) 지난 1984년부터 매달 실시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한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2013년 12월 조사 1,001명, 2014년 1월 조사 1,005명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는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영국 내 전체 성인들의 프로파일을 고려해 가중치가 부여된다.

5)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2013년 12월 9일자, “Most Britons have felt no benefits from economic recovery, opinion poll finds”.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3/dec/09/no-gains-economic-recovery-tories-cut-labour-lead-icm-guardian-poll>

5%포인트로 좁혀졌다. 한 달 뒤인 2014년 1월 조사<sup>6)</sup>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이 35%로 낮아진 반면, 보수당은 32% 지지율을 유지함에 따라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3%포인트로 더욱 좁혀졌다. 연립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2014년 1월 조사에서,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자신이 있다’, 즉 생활비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이 52%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연립정부가 꾸려진 몇 달 뒤인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표 2〉 정당 지지도 변화

(단위 : %)

지지 정당	2013년 12월 조사	2014년 1월 조사
노동당(Labour)	37(-1)	35(-2)
보수당(Conservative)	32(+2)	32(0)
자유민주당(Liberal-Democrats)	12(-1)	14(+2)
영국독립당(UKIP)	9(-1)	10(+1)
기타	9(-1)	9(0)

주 : 1) 괄호 안은 전달 조사결과와의 격차를 보여줌.

2) 기타 정당에는 스코틀랜드민족주의정당, 녹색당, 웨일즈민족당 등이 포함됨.

자료 : ICM과 가디언지 공동 여론조사.

## ■ 실질임금 감소 및 일자리 지역별 격차

하지만 실업률 등 지표로 확인되는 경제회복세와 ICM과 일간 가디언지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 일반의 기대감과는 달리 실제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ONS)에 따르면,<sup>7)</sup> 2013년 9~11월 기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6)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2014년 1월 14일자, “Support for Labour shrinks as faith in recovery grows, ICM poll finds”,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4/jan/13/support-labour-shrinks-economic-recovery-icm-poll>

7) ONS(2014), 앞의 글.

임금(보너스 포함)은 475파운드(약 84만 원)였고, 보너스를 제외할 경우 447파운드(약 79만 원)였다. 2012년 같은 기간과 견줄 때 전체 임금은 0.9%포인트 증가하여 명목상으로는 임금이 상승된 셈이다. 하지만 같은 비교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되려 하락한 것이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내놓은 보고서<sup>8)</sup>에서 실질임금 하락세는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각각 2.9% 상승했던 실질임금은 1990년대 1.5%, 2000년대 1.2%로 점차 상승폭이 낮아진 데 이어 2010년대에 접어들어 1분기 동안(2010년 1분기~2013년 2분기)에만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평균 주당 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하면 2010년과 2013년 사이 실질임금은 연간 평균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노총(TUC)은 “생산성, 성장률, 이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1980년대 이후 평균 임금상승폭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은 전례 없는 실질임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2010년대는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sup>9)</sup>

영국노총은 계속되는 생활비 압박과 함께 영국 내 지역별<sup>10)</sup>로 고르지 않은 일자리 성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영국노총의 최신 경제보고서<sup>11)</sup>에 따르면, 연립정부가 출범한 2010년 5월 이후 영국 전역에 걸쳐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의 수가 78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몇몇 지역(북동부, 북서부, 중서부, 남서부)에서는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4개 지역의 2010년과 2013년 사이 고용률은 각각 -0.6, -0.7, -0.8,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남서부(74.4%) 지역을 제외하고는 3개 지역 모두 2013년 고용률이 70%를 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영국 전역에 걸친 평균 고용률은 1%포인트 상승한 71.8%이다. 이와 견줘 요크셔 및 험버(2.4%), 중동부(1.8%), 동부(1.7%), 런던(1.6%), 남동부(1%) 지역의 고용률은 상승했고, 이들 지역의 2013년 고용률은 낮게는 70.5%(런던)에서 높게는

8) ONS(2014), An Examination of Falling Real Wages, 2010~2013.

9) TUC, 2014년 1월 13일자 보도자료, “Pay rises have got weaker in every decade since the 80s”. <http://www.tuc.org.uk/node/119555>

10) 영국에는 런던을 비롯해 동서남북으로 나뉜 총 9개의 지역(region)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 개념과 유사하다.

11) TUC(2014), Economic Report: the labour market in the regions of England.



76.2%(남동부)를 기록했다.

통계로 확인되는 고용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실질임금의 하락, 계속되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축소, 임시직 0시간 파트타임 노동자 증가,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사건 의뢰 시 일정 비용 지출, 안전보건 관련 보호장치 축소, 전임자 유급활동 시간 및 범위 축소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제약 등과 같이 개별적, 집단적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경이 개별 노동자에게는 물론 노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집단적 쟁의행위는 지역, 산업, 직업을 망라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sup>12)</sup>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은 2011년 11월에 진행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연립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임금 동결(및 삭감), 연금혜택 축소 방안 등에 반발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긴축재정 반대’, ‘연금개혁안 반대’라는 공통된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했다. 그해 11월 한 달 동안 파업 건수는 9건에 불과했지만 파업참가 노동자의 수는 114만 명에 달했다. 때문에 노동손실일수만도 99만 7천 일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초중등학교, 대학, 지하철, 소방서, 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업을 벌였는데, 특기할 만한 시기는 12만 7천 명이 참가한 20건의 파업(노동손실일수 11만 2천 일)이 발생한 2012년 5월, 18만 6천 명이 참가한 10건의 파업(노동손실일수 15만 6천 일)이 진행됐던 2013년 10월 등이다. 이처럼 개별 노조들의 파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부 긴축정책에 따른 개별적, 집단적 노동권 침해에 맞서는 전국적인 쟁의행위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확산되지 않고 있다. 2013년 한 해(11월 말까지) 동안 진행된 파업은 35만 6천 명이 참가한 122건(노동손실일수 41만 일)으로 2011년 공공부문 파업 때만큼의 광범위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영국노총(TUC)이 2013년 9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율된(전국 단위) 쟁의행위(co-ordinated industrial action)’<sup>13)</sup>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도 주목된다. 당시 대의원들은 정부 예산삭감 및 재정지출 축소 등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삭감, 임시직 0시간 파트타임 계약 남용 등에 반발하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율된 쟁의행위 안건을 지지했다. 이미 2012년 영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12) ONS(2014), 앞의 글.

13) TUC의 조율된 쟁의행위는 한국의 시기집중 투쟁과 비슷한 것으로 개별 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을 이슈로 파업을 결의하되 그 시기를 특정 일(주말이 아닌 주중 하루), 혹은 특정 주에 집중 시켜서 총파업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

이 안건을 발의한 바 있는 밥 크로우 RMT(철도해운교통노조) 사무총장은 “소방, 우편, 교통, 교육 등의 부문에서 이미 계획된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 조율된, 전국에 걸친 파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영국노총은 당시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는데, 1월 말 현재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 공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 맺음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한동안 저성장, 고실업, 불안한 노사관계 등을 경험했다. 2010년 5월, 연립정부를 구성한 보수당과 자민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면서 긴축정책을 폈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독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세, 노동시장의 안정성 회복이라는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긴축정책은 경제성장의 적이 아니라 조건임을 증명이라도 했다는 듯한 표정이다. 실업률은 당초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선결조건이라던 7%에 가까운 7.1%를, 고용률은 72%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 9~11월 실업자 수 변화는 199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기록됐고, 불과 3개월 만에 실업률이 7.4%에서 7.1%로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는 또 다른 측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지난 분기(2013년 9~11월) 동안 통계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규모가 15만 명이나 증가했고, 풀타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파트타임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44만 명인데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가 실질임금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시기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ILB**